

## [ 종합·해설 ]

# 정세균 임기 연장 계파 갈등 번지나

&lt;7월 6일&gt;

민주 주류 “지도부 흔들지 말고 전대 전까지 연장을”

비주류 “사퇴하고 임시지도부 구성해 전대 준비해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임기연장 문제는 계파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 대표의 임기만료 시점은 오는 7월 6일, 따라서 이전에 전당대회를 열어 대표 등 새 지도부를 뽑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7·28 재보선 일정을 감안, 전당대회를 8월 말에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현 당헌에 따르면 “사정에 따라 당무회의 의결로 임기 전후 3개월 내에

전대를 치를 수 있다”고 돼 있어 이를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 당헌에는 전대를 연기할 경우 당 대표직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는 것. 사실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 대표가 전당대회 수개월 전에 사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비주류 층에서는 임기 만료일 후에는 사퇴하고 임시지도부가 구성돼 전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정한 전당대회를

조차 하지 않아 이 같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 대표 층은 이에 대해 당연히 전당대회 전까지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3개월을 가득 채운 10월 6일까지 대표직을 수행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여기에는 주류에 다소 유리한 전대 규칙을 전면 개정하지 않고서는 당권 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비주류 층은 또 재보선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현 지도부가 직접 공천을 해야 한다는 자체가 기득권적 발상”이라며 “곧 꾸려지는 당 공심위에서 공천을 한 뒤 임시지도부가 추

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류 층은 “지도부 흔들기”라며 전대 전까지 정 대표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은 밟았다.

한 486 핵심 인사는 “지금은 재보선 승리를 위해 당력을 총집중해야 할 때”라며 “임시 지도부가 어떻게 책임지고 전투를 치를 수 있겠느냐. 전대 룰은 별도 기구인 전대관리에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절충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중도파 3선 의원은 “일단 현 지도부가 재보선을 치른 뒤 임시지도부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당대표 돼도 대통령에 불편만...”

친박계 초선 의원 회동서 불출마 의사 거듭 밝혀

7월 전당대회 불출마 신언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출마권유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친박(친박근혜)계 초선 의원들과 지난 16일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복수의 친박 의원들과 따로 전당대회 전날 시내 한 식당에서 당내 부산지역 친박 초선 7명과 재선 의원 1명 등 8명과 2시간간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찬에 대해 한 참석자는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초선 의원들이 박 전 대표를 모시고 저녁을 함께한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최근 친박계 내부에서 박 전 대표의 전대 출마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뤄져 자연스럽게 박 전 대표의 전대 출마 필요성에 대해 초선들이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거듭 불출마 의사의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가장 어려웠던 천막당사 시절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변하고 달라지겠다고 광복하게 했으나, 그때 지금 또 도와달라고 말하려니 입이 안 열어진다”며 “국민에게 면목이 없어 당 대표에 못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미디어법, 쇠고기 수입, 세종시 문제 등에 대해 얘기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걸로 만들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또 “당 대표를 맡아 정책에 대해 다른 소리를 하면 또다시 친이(친이명박)-친박 갈등으로 비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대표가 됨을 대통령에게 불편만 주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친이 “상임위 부결돼도 본회의 표결처리”… 野·친박 반발

## 세종시 수정안 ‘산넘어 산’

여야가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한 6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상임위 논의 결과와 관계없이 본회의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오는 22일 국토해양위 전 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 표결처리키로 했다.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최규성 의원은 17일 간사 협의를 갖고 전 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표결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전날 수정안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토론 및 표결 과정에서 전한 논의가 예상되나, 현재 국토해양위 31명 중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한나라당 친박계 9명과 야당 12명 등 21명에 달해 부결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친이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회부, 의원들의 투표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후세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본회의 표결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에

서 부결된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30명의 요구로 본회의에 재부의할 수 있다다는 국회법 87조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친이 직계 의원은 17일 “어차피 세종시 수정안은 출구전략에 들어간 것 아니냐”면서 “다만 상임위에서 사장시켜서는 안 되고 본회의에 부결시키는 방식이어야 하며 본회의 표결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친이계의 움직임에 대해 당장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 진영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민심을 모으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과유불급”이라며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언급 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하는데 국민과 약속을 헌신 짜처럼 여기는 정치인으로 기록에 남아서 자신과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 오기를 부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친이계가 ‘세종시법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추진할 경우 당내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0년 전남 도서행복지 디자인 모집**  
본 학원 출신 83명 합격 (합격률 67%)  
10년 연속 광주, 전남 최다 진학자 배출  
광주/전남 학제화 학과 70% 입학률

1차: 6월 22일 오후 3시~

전남대 광주교대

2차: 6월 26일 오후 3시~

전 체회

\*\*\*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강료도 할인 받아 합격하자! \*\*\*

특별이벤트!  
(누적증정률 90%)

특별이벤트!  
등록금 40% 할인 수강료 20% 할인

통영상  
1월 30일  
www.koocu.com  
www.koocu.com

개강 7월 1일

의사/의사가 되는 학술한전회

**PEET / MEET / DEET**

의대대학

의학대학원

의학대학원

한국학 대사학회 전문 8시전의 출판하는 학제적 학회 출판

적중예상  
코너를 이어

기초이론만  
교과서와 차별화된  
교과서와 차별화된

토익/텝스  
영어는 의사로서  
교과서와 차별화된

농영상  
전시회

전시회  
전시회

전시회  
전시회

개강 7월 5일

**유니넷 대학편입**

상위권대/ 의과대/  
간호대 전형편집

**서울고시학원**

154-4550  
http://koocu.co.kr

**서울경찰전문원**  
www.koocu.com  
광주 02-291-7920

**MDPass 의학원**  
http://koocu.co.kr  
광주 02-291-7920